

유승민 축출이나 사수냐... 친박·비박 사생결단

친박계, 오늘 최고위서 劉 사퇴 공세 강화...비박도 반격 태세

박대통령 추가 언급 주목...‘김무성 2기’ 당직 인선도 어려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섰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려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어떻게든 현 지도체제를 이끌고 가려는 비박(비 박근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2기 체제’의 당직 인선도 한동안 단행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박계는 주말 동안 사태 추이를 파악한 후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될 경우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부터 본격적 공세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이날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만능적인 서정원 최고위원과 청와대 정부특보인 윤상현 의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지난 26일 오후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당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뜻을 전한 상태다.

또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위한 의원총회(의총)를 열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친박계가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드는 배경에는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원내 운영에 누적인 불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세력 대결에서 판판이 밀려 상당히 위축됐던 친박계가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선 만큼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의도도 읽힌다. 친박은 지난해 7·14 전 당대회부터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경선, 국회의장 후보경선,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이따라 비박에 패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던 친박계가 투톱 중 한 축인 유 원내대표 축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지도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당 주도권을 장악,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한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친박

계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함으로써 현 지도 체제를 사실상 와해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해 보수 진영에 새판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주요 당직에 포진한 비박계로서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말과 행동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며 수위를 높이자 비박계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임계치를 벗어나면 반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도 주말 동안 사태 추이를 본 후 곧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동을 열어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28일 “지금 친박이 벌이는 일은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참담하다”면서 “경기도 장기 침체 위기에 빠졌고, 가뭄도 극박이 안된 마당에 원내대표 몰아내는 게 국사의 전부냐”고 따졌다.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은 “조폭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배신 운운하고 누구를 찍어내겠다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관해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도 갑갑하고 난감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28일 오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정실을 방문, 정의화 의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野, ‘거부권 정국’에 내분 주춤 후속 당직 인명도 ‘숨고르기’

내달 20일 중앙위 혁신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후속 당직 인선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두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며 문재인 대표가 더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석 사무부총장과 비서실장은 김관영 의원과 박광은 의원이 거부 입장에서 선화,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경우,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의 여파로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조직사무부총장 인선 등은 당내 계파 갈등 해소의 물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당분간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을 추스르고, 나머지 인선은 그때그때 채워나가는 방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2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 재신안의 당헌·당규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총장 공천 불개입’ 등 재신안을 내놓으며 “반아들여지지 않으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만큼, 바로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가 내달 20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사무총장을 공천 관련 기구에서 배제하고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공천 개입을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중앙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중앙위의 의결을 거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당헌·당규 수정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혁신에 관한 전권을 혁신위에 위임한 만큼 중앙위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전방위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전방위 압박 행보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재부의 하도록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진행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에 맞대응할 대외투쟁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강경 일반도 전략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재의결을 성사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외투쟁이라도 나섰다가는 토로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후에,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진행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유승민 자기정치’ 판단에 “함께 못해” 결론

‘증세 없는 복지’ 허구 ‘사드 도입 공론화’ 주장 등 엇박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더는 국정을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한 뒤로 보여준 행보를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로 판단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고,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는 어긋났다”고 전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면

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보여준 유 원내대표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이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1호 개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박 대통령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9명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주에서 강기정·김동철·박해자·임내현 의원, 전남에서 김승남·김영록·유윤근·주승윤·황주홍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8일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투표율 ▲제2차년도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실적

(공동발의, 대표발의 구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출석+재석) ▲상임위 소위출석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13개 지표로 계량화해 평가, 70여명(1/4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6월29일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어떻게 하면 돈을벌까?

무등산을 바라보자!

무등산 할아버지 말씀
 첫째, 남을 이롭게 하라
 둘째, 잘 만들어라
 셋째, 고개를 숙여라

이말씀에 가슴이 찡한 동지(투자자)를 찾습니다.

동지(투자자)를 위한 개요

사업개요 : 한식당 완전개선
 집밥 (전라도음식) 전국보급
 한식당 운영 현대화
 좋은 한식당지역 (20평내외)
 수도권 150개 개설(3년간)
 필요금액 : 10억 (1억 → 10억)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상환, 구체적협의
 사용기간 : 3년 (투자금보전 장치마련)

사업방침 : 하루세끼제공

편안한 장소
 칭찬 받는 돈을 번다
 모든사람이 좋으며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상호 : 호남평야 새벽밥 (실행중)
 365, 흥대점

■ 장소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375-5
 ■ 전화 : 063-532-0054 (사전 연락 요망)
 ■ 홈페이지 : www.folkvillage.co.kr
 ■ 전자우편 : song081205@naver.com

●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전10시~오후2시

정읍 송참봉 조선동네 대표 송기중 010-3734-4506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물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